

‘개인정보 침해 vs 소비자 보호’ 전금법 갈등

금융위-한은 대리전 양상... “두 수장, 끝장토론으로 해결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새로운 발전 수용할 법률 필요”
“세계적으로 전례없어... 反표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한 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입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이 격돌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빅테

크 내부 거래의 외부청산 필요성,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두고 정무위원 소속의원들과 업계·학계 인사 간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류재수 금융결제원 상무이사 등이 진출인으로 참석했다.

정순섭 교수는 전금법 개정안의 의의에 대해 “최근 다양한 지급 수단의 등장과 법화의 지급수단으로 역할이 변화하면서 금융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비현금지급수단의 발전에 따른 금융소외현상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수용할 법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 내용에 포함된 빅테크의 내부거래에 대한 금융결제원 의무청산 조항이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기진 교수는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의 은행계좌 연계 거래 및 내부거래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보내어 청산할 의무를 부과한다”며 “이러한 방식은 중국을 포함한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으며, 글로벌 스탠더드(표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

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따라 빅테크가 제공해야할 정보 범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교수는 “빅테크가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며 “결제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로 상위법에서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동현 교수는 내부거래의 외부청산에 대해 “외부청산 시 내부 송금 정보가 제공되며, 거래 시 어떠한 행위를 한 지는 제공하지 않는다”며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지급결제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분계리와 예탁금의 외부예치, 빅테크 외부청산의 3종 세트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안 교수는 최근 한은과 금융위 간 갈등에 대해서 빠른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두 기관이 언론을 통해 설전을 벌이는 형국인데, 국민의 한사람으로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며 “각 주장들이 실무진을 데리고서 끝장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디테일한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소지 가능성”

개인정보보호위 ‘체계 형해화 우려’
제18조 적용 배제... 원칙 맞지 않아
정보 범위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사생활 등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빅브라더(사회감시·통제 권력) 법’이라고 지적한 한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25일 전금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질의에 “개정안의 일부조항은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돼야 하며, 개별법상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전금법 개정안은 제18조 전체의 적용을 배제해 보호법상의 이념과 원칙에 맞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제공토록 한 ‘이용자에 관한 정보’ 및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

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위원회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제공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인 개정안에 담지 않고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건강, 성적 취향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금법 개정안 중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배치되는 내용을 수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스시스

정도록 금융위와 협의할 방침이다. 윤재옥 의원은 “전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제법 등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며 “빅브라더법이라는 우려가 많은 만큼 신중하게 논의되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NH농협銀 혁신기업 육성 프로그램 5기 모집

범농협 계열사와 사업제휴 기회

NH농협은행은 다음달 24일까지 혁신기업 육성·협업 프로그램 ‘NH디지털 챌린지+’ 5기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NH디지털 챌린지+’는 디지털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고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투자·법률·마케팅·재무 분야 등의 컨설팅과 범농협 계열사와의 사업제휴 기회 및 후속 투자기회 등을 제공한다.

이번 ‘NH디지털 챌린지+’ 5기의 테마는 ‘NH와 꿈꾸다’이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 뿐 아니라 마이데이터, 플랫폼서비스, 헬스/인슈어테크, 농업, ESG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과 범농협 협업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혁신성 ▲사업성 ▲시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NH디지털혁신캠퍼스내 업무공간 ▲역량강화 전문교육 ▲맞업데이(협업세미나) ▲1대1 오피스아워 ▲데모데이 ▲네트워킹 행사 등이 제공된다.



권준학 은행장은 “‘NH디지털 챌린지+’는 국내 금융권 최고 수준의 협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신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들이 농협은행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디지털 신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이밴터스 홈페이지에서 ‘NH디지털 챌린지+’를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안상미 기자

우리금융, 경영진 ‘디지털 인사이트’ 특강

디지털 마인드 제고

우리금융그룹이 경영진의 디지털 마인드 제고와 디지털전환(DT) 문화 확산을 위해 손태승 회장 및 지주사 경영진 대상 ‘디지털 인사이트’ 특강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지털 인사이트 특강은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디지털 분야 실무 담당 직원들이 직접 강사가 돼 오는 6월까지 매월 2회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4차 산업 디지털 전문분야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마이데이터, 오픈 API, 빅데이터, 스마트뱅킹, 블록체인, 페이먼트, 디지털 트랜드 등 다양한 분야별 이론 및 사례를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손회장과 경영진들은 실무에서 근무 중인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은 물론 디지털 분야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금융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임원이라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와 친숙도를 높여 올해 경영전략인 ‘디지털 범버원 도약’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은 임직원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 리버스멘토링, 우리디지털인사이트뿐 아니라 KT와 빅데이터·AI 공동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산학연계를 통해 직원들의 디지털 신기술과 트랜드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손태승 회장은 “이제 디지털부문은 미래를 담보할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특강이 경영진부터 디지털 마인드를 갖추고, 그룹 전체에 디지털 문화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석 기자

KB 모바일 인증서 가입자 700만명 돌파

KB국민은행은 25일 ‘KB모바일인증서’의 가입자가 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KB모바일인증서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이 2019년 7월 자체기술로 개발했다. KB국민은행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공공분야 전자서명시범사업’ 최종사업자를선정돼 지난달부터 국제청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에서KB모바일인증서로 간편 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KB금융그룹 내 KB증권, KB카드,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KB저축은행 등 주요 계열사 앱에서도 KB모바일인증서가 사용 가능하다.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B모바일인증서는 KB국민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도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거래가 가능하다. 복잡한 암호 대신에 패인·지문·페이스 ID(아이폰) 등 고객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인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KB모바일인증서는 통장 개설부터 이체 및 상품가입까지 금융업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